

“정부, 전남권 의대 설립 약속 반드시 지켜야”

김영록 지사, 설립 당위성·추진의지 다시 강조 신설될 교육부 ‘의대지원관’에 입장 전달 방침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전남권 국립의과대학교 설립은 대국민 약속 사항이기에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정부의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기자회견에서 간담회를 열어 “전남권 의대는 정부가 답화문 방식으로 국민들 앞에서 의대가 없는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을

수렴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지난 11월29일 전남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양 대학의 통합에 대해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각 부처 장관들도 국회에서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수차례 지원하겠다 답변했다”며 “탄핵

정국 상황에서도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등 양 대학과 전남권 의대 설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또 “대통령 탄핵 이전에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의정 협의체에 야당이 빠졌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협의체를 운영하자고 제안한 만큼 그동안 민주당에도 건의할 수 있다”며 “다만, 현재 법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 만큼 정부 내 프로세스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민주당 지원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정 갈등과 관련, 김 지사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엔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은 부족했다”며 “더 이상 강대강 대처로 가선 답이 없는 만큼 대화를 통해 절충점과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곧바로 의료개혁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신설을 공식화한 바 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목포대와 순천

대가 지난달 15일 통합대학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대학 통합에 합의하고 지난달 28일 통합의대 명의로 한국대학교육평가원에 예비평가인증을 신청하는 등 전남권 의대 신설이 속도를 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남권 통합의대 신설 의제를 다뤄줄 것으로 기대했던 여·의정 협의체가 이달 1일 무기한 중단된 데 이어, 12·3 계엄사태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문에 ‘전공의 차단’이 명시된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요구 등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며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양 대학과 함께 탄핵 정국 등 시국 상황에 동요하지 않고 통합의대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목포대와 순천대는 2026년 통합의대 개교를 목표로 올해 안에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내년 교육부 산하에 의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의대교육지원관’이 신설되는 만큼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설립 당위성을 적극 피력한다는 복안이다.

/양시원 기자



겨울철 가로화단 보호막 설치 16일 오전 광주 북구청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 직원들이 관내 한 도로 가로화단에서 겨울철 눈과 바람, 제설제로부터 풀과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방풍막을 설치하고 있다. /김영근 기자

강기정 시장 “가치 행정이 광주의 힘”...공직자 격려

올해 마지막 정례조회...1년 성과 공유

강기정 광주시장이 올해 성과를 공유하며 가치 있는 행정을 강조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강 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열었다.

강 시장은 “한 해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난 공직자들이 ‘광주의 힘’이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 시장은 공직자들과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베스트10’ 등 올해 광주시의

노력과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그는 ‘12·3 내란 사태’로 숨가쁘게 돌아갔던 지난 10여일 간 공직자들의 노고도 치하했다.

강 시장은 “비상계엄이 내려졌던 45년 전을 생각하면 어쩌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오월을 경험하고 교훈 삼은 시민과 국민들이 강력히 저항하고 싸워준 덕분에

우리는 역사의 장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 시장은 “오월의 가치는 포용 정신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며 “광주는 한강 작가의 말처럼 인간의 참혹성과 존엄성의 공존을 뜻하는 보통명사가 됐고 행정은 보통명사 ‘광주’의 가치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우리는 가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달라”며 “이는 곧 광주의 힘이 된다”고 역설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도, 외국국적 아동 330여명 月10만원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다니는 0-5세 대상 내년 1월부터 시행

전남도가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

외국국적 아동의 보육 여건 개선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해 지역 330여명의 외국 국적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이다.

지원을 바라는 영유아 가정은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시·군에서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현재 유치원에서는 3-5세 외국 국적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가정은 보육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충북·경남 등 다른 지자체는 3-5세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남도는 0-5세 외국 국

적 아동 보육료를 전격 지원하게 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 외국 국적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 정착, 인구 감소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온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은 전국에서 등록외국인 증가율(48.6%)과 인구 대비 외국인근로자 비율(40.5%)이 가장 높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국가유공자 보훈·참전 명예수당 내년부터 올린다

2년간 단계적 인상...65세 이상 미참전 공상군경까지 확대

광주시가 보훈·참전 명예수당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광주시는 16일 “그동안 재정 문제로 혜택을 받지 못한 65세 이상 미참전 공상군경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당 신설과 인상은 광주시가 지역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광주시는 지난 1년 간 5개 자치구에 수당 신설과 인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2만여명의 국가

보훈대상자 중 미참전 공상군경을 포함하면 보훈·참전 명예수당 지원 대상자는 기존 7천200여명에서 7천800여명으로 600여명 늘어났다.

우선 독립유공자 유족 등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은 현행 월 5만원에서 2026년 월 8만원으로 3만원 인상한다.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월 6만5천원, 2026년 월 8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할 계획이다.

신설된 미참전 공상군경은 2025년 6만5천원에서 2026년 8만원으로 인상된다.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은 대상자별로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80세 이상은 현행 월 13만원에서 2025년 월 15만5천원, 2026년 18만원으로 인상된다.

65세부터 79세까지는 현행 월 10만원에서 2025년 11만5천원, 2026년 월 13만원으로 증가한다.

신청 희망자는 2025년 1월2일부터 신청서,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와 통장사본을 구비해 해당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타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받을 수 없다.

/변은진 기자

산타의 선물 곡성물에서

골라 봐요

12월 19일(목) ~ 24일(화) 1인 3매 / 최대5만원

곡성의 산타는 곡성물!
크리스마스를 맞아 모든 회원분들께
통근 30% 할인 기획전

전 상품
30%